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 · 필기 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제6강

공정조달 관리

분쟁·해석·위반 시 제재

분쟁조정과 유권해석,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다룹니다. 제재는 기업의 존립을 좌우하는 주제입니다.

세부항목 2

세세항목 9

확인문제 10문항

강의 50~7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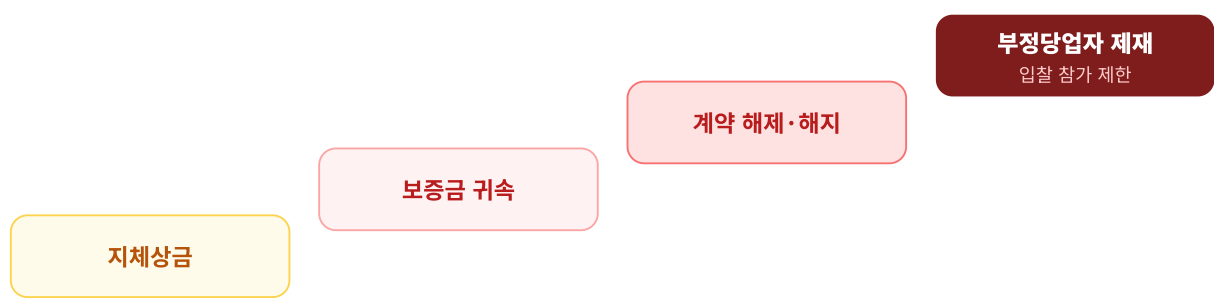
공공조달관리사 강의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의 세부항목·세세항목 체계에 따라 구성한 강의 자료
법령·제도·시스템 화면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다루는 출제 범위

- 6-1 공공조달 법규 분쟁 및 해석 — 분쟁조정 / 유권해석·감사사례 / 계약보증금 쟁점 / 부정당제재 처분 법리 / 허위서류 쟁점
- 6-2 법규 위반 시 제재 — 계약의 해제·해지 / 부정당업자 제재 / 불공정조달행위 제재 / 부당이득금 환수

이 강의의 큰 그림 — 제재의 사다리



제재의 강도 —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겁고, 마지막은 시장 참여 자체를 막는다

금전적 제재는 회복 가능하지만, **부정당업자 제재는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체를 막습니다**. 공공조달 비중이 큰 기업에게는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발표자 노트 — 도입 5분

- 위 사다리 그림을 먼저 그리고 "**어디까지 가면 회사가 위험해지는가**"를 물으면 집중도가 확 올라갑니다.
- 이 강의는 **실무자에게 가장 절실한 주제**입니다.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면 몰입이 좋습니다.
- 제재 기간·감경 요건 등 구체적 수치는 개정되므로 **구조와 법리**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① 공공조달 분쟁조정

세세항목

공공조달 분쟁조정

① 협의



② 이의신청

발주기관



③ 분쟁조정

조정기구



④ 소송·중재

항목	내용
대상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 해제·해지 등
절차	신청 → 사실 조사 → 조정안 제시 → 당사자 수락 여부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정리 — 화해의 성질
장점	소송보다 신속·저비용 , 거래관계 손상이 적다
한계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기한이 가장 먼저다

이의신청·조정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일단 협의해 보자"로 시간을 보내다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주장도 절차적으로 막힙니다**. 분쟁이 감지되면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 제1원칙입니다.

② 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세세항목

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자료	성격	활용
유권해석	소관 부처가 조문의 의미를 밝힌 것	해석이 갈리는 조항의 실무 기준
질의회신	개별 사안에 대한 기관 답변	유사 사안 참고 .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를 수 있음
감사사례	감사에서 지적된 위법·부당 사례	하지 말아야 할 것 의 목록
판례	법원의 확정 판단	가장 강한 근거

💡 감사사례가 실무에서 갖는 무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항목은 담당 공무원이 **가장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쪼개기(분할 발주)**, **과도한 자격 제한**, **수의계약 남용**, **검사·검수 부실**이 있습니다. 공급자도 이를 알면 **발주기관이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보증금 쟁점

세세항목

계약보증금 쟁점

쟁점	내용
법적 성격	계약 이행을 담보. 불이행 시 국고 귀속
귀속의 요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행이어야 한다
전부 vs 일부	이행된 부분이 있으면 전액 귀속이 과도한지가 다투어진다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증금 귀속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감액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는지

💡 다툼의 핵심은 언제나 "귀책"

불이행이 있었다라도 그것이 발주기관의 협조 지연·설계 오류·불가항력 때문이라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기 4강에서 강조한 "지연 사유를 문서로 남긴다"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④ 부정당제재 처분 법리

세세항목

부정당제재 처분 법리

법리	내용
처분의 성질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행정처분 — 계약상 조치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
불복 방법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룬다. 집행정지 신청이 실무상 중요
비례원칙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중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효력 범위	제재를 한 기관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도 영향 이 미칠 수 있다
승계	합병·영업양도 시 제재 효과의 승계 여부가 다투어진다

⚠ 집행정지가 실무의 승부처

제재 처분을 다투는 데 **몇 달~몇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입찰에 못 들어가면 **이겨도 회사가 이미 무너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안 소송보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⑤ 허위서류 관련 쟁점

세세항목

허위서류 관련 쟁점

쟁점	내용
전형적 유형	실적확인서 부풀리기, 기술자 명의 대여, 인증서 위·변조, 직접생산 허위
고의·과실	단순 착오와 고의적 허위를 구분해야 하나, 제출자의 책임이 원칙
낙찰 전 발견	입찰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후 발견	계약 해제·해지, 보증금 귀속, 제재
부수 책임	형사 책임(사기·사문서위조 등), 부당이득 환수

⚠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제출 서류의 진정성은 **제출자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준 서류라도 그대로 제출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기에서 배운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이 형식이 아니라 **책임의 표시**인 이유입니다.

①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세세항목

계약의 해제 및 해지

항목	내용
사유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 착수 지연 , 이행 불능, 지체상금이 일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 청렴계약 위반 등
효과	해제는 소급, 해지는 장래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선금 반환
절차	사유 확인 → 통지 → 정산. 통지 없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발주기관 사정	발주기관 측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기왕의 이행분과 손실을 정산

② 부정당업자 제재

세세항목

부정당업자 제재

이 강의, 나아가 1과목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제도**입니다.

유형	대표 사유
계약 이행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부실·조작 이행, 안전 관련 중대 위반
입찰 과정 관련	담합, 입찰 방해, 허위서류 제출,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청렴 관련	뇌물·금품 제공, 청렴계약 위반
기타	하도급 관련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제재의 구조	내용
효과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등. 기준은 법령에 규정되며 개정된다
감경	고의성이 없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 감경 사유 가 인정될 수 있음
과징금 대체	일정한 경우 제재를 과징금으로 갈음 할 수 있는 제도
공표	제재 사실이 공개 되어 시장의 신뢰에도 영향

💡 과징금 대체 제도의 취지

참가 제한은 **기업**을 **문 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책임이 가볍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도합니다. 그래서 **금전 제재(과징금)로 갈음**하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③ 불공정조달행위 제재

세세항목

불공정조달행위 제재

유형	내용
담합	입찰 참가자끼리 가격·낙찰자를 미리 정함 — 공정거래법상 제재도 병행
허위·부정 취득	허위 자료로 계약을 따내거나 우대제도 자격 을 부정 취득
직접생산 위반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실제로는 타사 제품을 납품
원산지 거짓	원산지를 속여 납품
규격 미달 납품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 우대제도를 악용하면 더 무겁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직접생산 없이** 참여하거나, 장애인기업·여성기업 확인을 **부정 취득**해 혜택을 받는 행위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강하게 제재됩니다. 4강에서 배운 우대제도의 이면입니다.

④ 부당이득금 환수

세세항목

부당이득금 환수

항목	내용
의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돌려받는 것
사유	허위·과다 청구, 규격 미달 납품, 이중 청구, 부정한 방법의 계약 체결 등
범위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 사안에 따라 가산금 이 붙을 수 있음
병과	환수는 제재와 별개 로 이루어진다 — 둘 다 받을 수 있다

💡 세 가지가 함께 온다

허위서류로 계약을 따낸 경우 실무에서는 대개 ① **계약 해제·해지** ② **부정당업자 제재** ③ **부당이득 환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기에 형사 책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서류 조작"의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점을 강의에서 반드시 각인시키세요.

🔑 발표자 노트 — 15분, 강의의 클라이맥스

- 마무리에서 "세 가지가 함께 온다"를 강조하면 강의가 강하게 닫힙니다.
- 수강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제재 기간이 얼마인가"입니다. 구체적 기간은 개정되므로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편이 낫습니다.
- 실무 조언 한마디: "제재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행정지 검토"라고 알려 주면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할 프레임

제재 사다리

지체상금 → 보증금 귀속 → 해제·해지
→ 참가 제한

행정처분

부정당제재는 계약 조치가 아닌 공권력
행사

집행정지

실무의 승부처

귀책

보증금 귀속 다툼의 핵심

과징금 대체

참가 제한이 과도할 때의 대안

세 가지가 함께

해제·해지 + 제재 + 환수

✓ 이것만은 반드시

- 분쟁 대응은 **기한 확인이 첫걸음**이다.
- 조정이 성립하면 **화해의 성질**을 가진다.
- 계약보증금 귀속의 다툼은 결국 **귀책사유** 문제다 — 기록이 증거가 된다.
- 부정당업자 제재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집행정지**가 관건이다.
- 제재는 **비례원칙**에 어긋나면 위법이 될 수 있다.
- 허위서류는 "**몰랐다**"로 면책되지 **않는다** — 제출자의 확인 의무.
- 우대제도의 부정 취득은 **더 무겁게** 다뤄진다.
- 허위로 계약을 따내면 **해제·해지 + 제재 + 환수**가 함께 온다.

제6강 확인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과 해설이 표시됩니다. · 10문항

Q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계약상 약정에 따른 사법상 조치이다.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형사처벌의 일종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정답 ② —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며, 실무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Q2.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을 다룰 때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보증서 발급 기관의 종류

계약금액의 규모

불이행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입찰 참가자의 수

정답 ③ — 발주기관의 협조 지연·설계 오류·불가항력 때문이라면 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연 사유의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Q3. 허위서류 제출이 계약 체결 이후에 발견된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계약 해제·해지,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다음 입찰에서만 불이익을 준다.

정답 ① — 낙찰 전 발견이면 **입찰 무효·낙찰 취소**, 계약 후 발견이면 **해제·해지 + 제재 + 환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Q4.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제재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모든 위반을 금전으로 해결하기 위해

참가 제한이 과도한 경우 금전 제재로 대체해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답 ④ — 참가 제한은 **기업을 문 닫게 할 수 있는** 처분이므로, 책임이 가볍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금전 제재로 갈음할 길을 둔 것입니다.

Q5. 분쟁 발생 시 실무 제1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시 소송을 제기한다.

이의신청·조정 신청의 기한부터 확인한다.

언론에 먼저 알린다.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정답 ② —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주장도 절차적으로 막힙니다.**

Q6. 불공정조달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입찰 참가자끼리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실제로는 타사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공고 기간에 발주기관에 조항의 의미를 질의하는 행위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는 행위

정답 ③ — 질의는 **제도가 마련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오히려 공식 회신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7. 부당이득금 환수와 부정당업자 제재의 관계로 옳은 것은?

서로 별개의 조치이므로 둘 다 이루어질 수 있다.

환수를 하면 제재는 할 수 없다.

제재를 하면 환수는 면제된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정답 ① — **해제·해지 + 제재 + 환수**가 함께 오며, 형사 책임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Q8. 협력업체가 준 서류를 그대로 제출했는데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협력업체만 책임을 지므로 제출자는 면책된다.

고의가 없으면 어떤 불이익도 없다.

계약금액을 감액하면 해결된다.

제출 서류의 진정성은 제출자가 확인할 의무가 있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답 ④ —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은 형식이 아니라 **책임의 표시**입니다.

Q9.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금액 기준을 피하기 위한 분할 발주(쪼개기)

사전규격공개를 통한 의견 수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사유의 남용

정답 ② — 사전규격공개는 **제도가 권장하는 절차**입니다. 나머지는 대표적 지적 사항입니다.

Q10.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해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재 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처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

위반의 정도에 비해 제재 기간 등이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

제재 사실이 공표된 경우

정답 ③ —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중한 제재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강의 · 필기 1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 제6강 공정조달 관리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의 세부항목·세세항목 체계를 따라 구성한 강의 자료입니다.

법령·제도·시스템 화면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강의 및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